

[서식 예] 위약금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약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로부터 ○○시 ○○구 ○○길 ○○-○○ 소재 원고 소유인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단층주택 ○○m²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금 60,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같은 해 ○○. ○.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약 피고가 위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 6,0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참조).

2.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기일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15일의 유예기간을 주었음에도(갑 제2호증 참조) 역시 위 건축자재를 공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다른 건축자재상으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건축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위약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위 위약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 | 건축자재공급약정서 |
| 1. 갑 제2호증 | 통고서(내용증명우편) |
| 1. 갑 제3호증 | 우편물배달증명서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 1통 |
| 1. 소장부분 | 1통 |
| 1. 송달료납부서 | 1통 |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분 제출		
비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98조).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당사자 일방이 계약위반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도로 이를 상대방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계약위반자에게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계약위반자의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성질을 가진 것)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함(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의 과다여부는 그 대상채무를 달리할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으며,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
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
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
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
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
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
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
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